



4면

차세대반도체 구현 솔루션 '집대성'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윤 2월 21일) 제324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1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제53회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서거석 교육감(가운데)을 비롯한 입상선수단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숙련기술인 축제’ 전북 기능경기 성료

123명 우수 기능인 배출... 10월 개최 전국대회 참가

전북도내 숙련기술인들의 축제인 제 53회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가 5일간 열려 막을 내렸다.

전북도는 10일 오전 11시 전주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서거석 교육감(가운데)을 비롯해 대회관계자, 지도교사, 출전선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열리는 이번 시상식은 전북기능경기대회 입상선수들과 우수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북대회는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33개 직종에 221명의 선수들이 열린 기량을 펼쳐 금메달 34명, 은메달 33명, 동메달 32명, 장려상 24명 등 총 12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상자들에게는 메달과 상장 상금이 수여됐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비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기관에는 대상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최우수상은 강호항공고등학교, 우수상은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가 선정돼 상장 트로피 상금이 수여됐다.

또한 오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충남도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지역 대표 선수로 참가해 전국에서 모인 숙련기술인들과 다시 한번 기량을 겨루게 되며,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면 시상금과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그동안 흘렸던 땀과 열정으로 값진 결과를 얻어낸 입상 선수들과 지도교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10월 충남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도 전북기술인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남은 6개월 여동안 준비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조속 개정하라”

윤수봉 도의원, 임시희 본회의서 “광역시 없는 전북, 정부 지원 한 톨도 못받아
정부 용역결과·실제 교통량 등 반영 도청소제지·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포함을”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사진)은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길 나섰다.

현행 광역교통법에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라



정부에서는 광역교통망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고, 용역 결과 50만 이상 도청소제지

북도는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에서 배제돼 국가예산을 단 한 톨도 받지 못했고, 교통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 전주권을 대도시 광역권으로 포함시키는 안이 제안됐다. 도청소제지이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수원, 청주, 창원, 전주 등 4곳으로 전주를 제외하곤 나머지 도시들은 현행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망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그 혜택에서 배제돼 도민들은 교통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윤수봉 의원은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

기 상황 속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대도시권 포함을 골자로 하는 광역교통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시는 생활인구가 100만이 넘는 중추도시로 익산, 완주 등 인근 지역을 포함한 교통통행량(11만6,046대/일, 2019년 기준)은 울산권(12만9,521대/일)과 광주권(13만23대/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제 교통 수요를 반영하여 대도시권으로 인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10일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 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내 작은 학교에 ‘활기’

도교육청, 광역형 공동통학구 어울림학교 운영

유학생·입학생 등·하교시 교통수단 제공

교육과정 따른 운영비도 지원... 이달 선정계획 안내

작은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 소리가 들린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광역형 공동통학구 어울림학교 운영 계획(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작은 학교 실리기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도시지역 과대·과밀 학급 해소 등을 위해 시·군 지역간 경계를 뛰어넘는 공동통학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중심 미래교육, 일관된 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교사 및 친구들 관계를 통한 인격 형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출공 강조해 온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다.

이에 따라 광역형 공동통학구 어울림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해당 시·군 교육청의 통의만 일하면 광역형 공동통학구역을 설정

할 수 있다. 다만,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의 일방향 전·입학만 허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학교는 학생 수 10명 이상 60명 이하이고 큰학교는 학생 수 800명 이상인 초등학교다.

특히, 광역형 공동통학구 어울림학교에는 유·입학생에 대한 등·하교시 교통수단이 제공된다. 학교 내 통학거리 1km를 초과하는 통학 학생이 13명 이상인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12명 이하이면 통학택시를 지원한다.

한편, 어울림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월 중에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광역형 공동통학구 어울림학교 선정 계획을 안내한 후, 5월에 교육지원청에서 어울림학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현행 농작물재해보상, 현실적 보상 이뤄지지 않아”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제도 개선 촉구
“재해 피해서 실질적 보상 이뤄지도록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사진)은 10일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보장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관련사진 3면>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현재 농작물 재해보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복구비는 생산비 일부만 재생산 보장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1차 농업재

회 등 현실적인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도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데도

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은 농민들의 불신이 큰 손해평가에 관한 피해를 산정 방법 개선사항 등이 담기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농작물재해보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